



양계업계 뉴스초점

홍도팀

본회 채란업 안정화 방안 건의

소비확대 및 유통개선 투자 요청

지난 22일 산란계산업안정화 비상대책 위원회는 난가 폭락으로 채란농가의 극심한 경영난이 가중됨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농림부 축산국을 방문하였다.

이 자리에서 생산증가로 불황이 시작되긴 하였지만 과거 정부의 무계획적인 시설자금 지원도 한 원인이 되는 만큼 난국을 함께 풀어가자는 내용의 건의를 하였다.

장·단기 대책으로 안정화 방안을 건의하였는데 생산농가는 사육량을 줄이고, 정부는 계란의 지속적인 소비촉진, 공판장과 집하장 지원, 자조금 의무납부 입법화조치, 원산지표시 강화 등 사회간접시설 확충에 대폭적인 지원을 요청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낸 바 있다.

양계산업 범 안정화대책 수립 시급

시설확대, 수입증가로 자생력상실 우려

양계업 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모든 양계인들이 느끼는 것 같다. 그만큼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고 있음을 실감케한다. 국제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사육시설은 과잉상태이고, 소비는 답보상태, 수입은 주변 여건에 따라 밀고 들어와 국내 생산이 감소하여도 가격인상에 제동을 걸고 있다. 양계업이 존속하기 위해서는 범 업계 차원의 안정화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별도의 위원회를 조직하여 미래의 비전과 솔직히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분석하여 시장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할 단계에 접어들은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계란소비 확대키로

4월1일부터 급식량 50% 확대

국방부는 최근 난가 폭락과 관련하여 농림부가 요청한 우리 계란 더먹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새로 예산을 확보하여 4월 1일부터 9월까지 6개월간 현재 소비량보다 50%를 더 늘려 총 4,750만개를 추가로 구매하기로 하였다. 또한 농림부는 교육부, 한국음식업중앙회 등에도 계란소비를 통하여 양계농가를 돕자는 협조요청을 한 상태여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사료협회도 각 회원사에 계란소비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소속 회원사별로 계란을 직접 구매하여 소비시킬 계획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에 따라 계란소비에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게 하고 있다.

노계정육 구입자금 사용 부진

재고 누적과 비수기 겹쳐

정부가 난가안전을 위해 긴급 지원한 노계정육 구입자금 60억원이 육가공업체들의 참여 부족으로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제일제당을 비롯한 노계정육 처리업체들이 신청한 금액은 60억원 중 약 40여억에 이르는 저조한 금액이었으나, 이마저 담보부족과 금리 구입가 등에 이견을 보여 노계정육 구입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업체는 그다지 많지 않아 노계도태를 유도하여 생산량을 감소시킨다는 당초의 취지에 어려움을 미쳤다. 또한 노계가 대폭 도태되어야 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구입자금을 지원한다는 소식과 함께 노계출하가 감소하여 노계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 생산조절의지를

다시 되새겨보는 계기도 되었다.

계란 실거래 가격 발표

생산자 지지 속에 강행

계란가격 발표는 순수한 계란 생산자들이 힘을 모아 전국계우회연합회관 단체명으로 산지에서 생산자들이 받아야 할 가격 기준을 제시해 주는 차원에서 엄청난 힘을 발휘하여 왔다.

그러나 계란판매 방식이 바뀌게 되면서 유통과정에서 수반되는 부대 비용을 합쳐서 발표해왔기 때문에 계란 생산량이 많아지는 시기에는 어김없이 할폭 폭이 기준가격에서 얼마만큼 벌어지는지조차 알 수 없을 정도로 거래가 문란해지는 것이 상례였다. 이를 현실성 있게 고쳐보자는 차원에서 생산자들이 현지에서 받아야 하는 기준가를 발표하고 3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거래가를 조정토록 하였다.

닭고기 수입량 꾸준히 증가

육계가격 상승에 걸림돌

육계가격이 생산량과 소비량의 변화에 따라 산지 출하가격이 결정되어 왔으나, 최근 수입이 자유화 된 후 반입량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상승시점의 육계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3월 15일까지 통관된 수입물량은 약 3,200톤에 달해 이 같은 추세대로라면 3월의 총 수입량은 7천톤에 육박하지 않겠느냐 하는 조심스런 예측들을 하고 있어 지구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중계업체와 육계업체간에 육계업 활성화 차원에서 긴밀한 협조와 아울러 계육업체와도 신선육 확대 공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양계**